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음 8월 28일) 제16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국체전 필승 결의 27일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 선수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당론채택과

## 넓고 협소한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방문 추미애 더민주 대표에 주요 현안 건의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당론채택과 35년 전에 지어져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驛舍)의 전면개선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짧팍 폭락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시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당초의 조성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

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에 불과하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김 시장은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사 문화재급 전면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81년에 지어진 전주역은 제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데다 편의시

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 역 가운데 서울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과 세계적인 배낭여행 지침서인 '롤리 플래닛'이 1년 안에 가바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에서 전주를 3위로 선정하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전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시장은 전국적 관광명소로 입지를 굳힌 한옥마을 인기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용과 전주의 첫인상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 ▶ 매일 INDEX

- 2면 정부 의료지원금 수도권 집중
- 4면 게임과학교 설립자 부부 실형
- 6면 내달 한우·닭 가격 내린다

오늘 김영란법 시행

## 검찰 “법 악용한 사례 수사권 자제할 것”

“자체 수사 첩보 통한 수사 개시도 자제”

검찰이 28일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TF(팀장 윤용걸 대검 기획조정부장)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조치'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해)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자가 신분을 숨기는 경우, 근거 없는 신고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공탁종결' 처리 기준에 따른다는 취지다.  
또한 검찰의 자체 수사 첩보나 인지를 통한 수사 개시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윤용걸 대검 기초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수사 개시에 중요한 부분은 신고로 보인다"며 "별다른 범죄 혐의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황만을 가지고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공식적인 민원전달 절차를 더욱 정비해 정당한 청원이나 권리구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 만큼 민원전달 절차 등을 정비해 국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과 기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와 중복될 경우 처리방향도 정했다.  
검찰은 뇌물죄나 배임수재죄가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더 엄격하고 법정형도 높으므로 금품수수 등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보다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리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행위 중 과태료 사안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업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주요 사례를 꼽아보면 "사건을 법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면 법령 위반이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명수배자가 "자식의 결혼식 때까지 검거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는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에 업무를 수행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또 부모가 구속된 자식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법령에 따른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선처해 달라는 취지라면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뉴시스

야 3당, “백남기 농민 특검 적극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7일 농민 백남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야3당은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중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남기농민 부검명장 재청구 관련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는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백서 부검명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부검의 부당성은 명백하다. 당시 현장의 많은 목격자와 영상이 있다. 다수의 진료기록 등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며 "법원은 재청구된 부검명장 역시 기각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검찰은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 부검의 이유를 먼저 부검하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우측 상단 상태표시줄과 Always On Display에 있는 그린 배터리 아이콘을 확인하세요

## 갤럭시 노트7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갤럭시 노트7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10월 1일부터 새로운 갤럭시 노트7의 일반판매를 재개합니다. 아직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갤럭시 노트7으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일 안에 제품 교환을 마무리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삼성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일동